



민주주의 유린 / 경제위기 고통전가 / 철도 민영화 재앙 추진

몸통을 고냥 뒤썬 안 된다



‘이명박근혜’ - 새누리당 - 국정원이 공
모한 총체적 정치 공작의 실체가 분명해
지고 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까맣다”고 한 권영세의 지난해
12월 10일 발언이 폭로된 것이다. 권영세
는 당시 박근혜의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
장이었다.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이 비공개 당내 회의에서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다] ... 공개
하려고 했[다]”고 말한 사실도 유출됐다.

결국 연이은 폭로로 첫째, 국정원의 불
법적인 정치·선거 개입의 몸통이 박근혜
(와 이명박)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둘
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검·경의 비호, 대화록 공개와 NLL 색깔
론이 처음부터 한 몸통이었다는 것도 드
러났다.

새누리당과 주류 지배자들은 국정원 같
은 보안 사찰 기구를 틀어쥐고, 국내 진보
진영과 노동운동을 사찰하며 정치 공작을
주도해 왔다. 그러면서 친재벌·반민중
정책들을 추진하고 이에 맞선 저항들을

짓밟아 왔다.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과 각종 ‘종
북’ 마녀사냥이 대표적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국가닷컴’이 인터넷에 올리
지저분한 글이 무려 23만 건에 달할 수 있
다고 한다.

지금도 국정원의 범죄는 이어지고 있
다. 최근 YTN의 기사 검열과 보도국 회의
사찰 사실이 폭로됐고, 인하대에서는 시
국선언을 사찰한 것이 새로 폭로됐다.

폭로된 음성 파일에서 권영세는 “[대화
록 공개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컨턴전시플랜(비상 사태에 대비하
는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비상계획은 박근혜가 어려울
때마다 가동돼, 동요하는 우파를 결집하
고 반대파를 분열·약화시키는 구실을 해
왔다.

비상 계획

이제 와서, 박근혜는 이런 과정들을 “전
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다. ‘비상계획’이 작동될 때마다 박근혜는
맨 앞에서 설쳤다. 김무성이 대화록을 ‘울

먹이며 낭독’할 때 박근혜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결국, 이 모든 범죄의 몸통이 박근혜라
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학생
들의 시국선언은 이제 교수들과 종교계,
노동조합의 시국선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경제 위기 심화와 박근혜의 고통
전가 속에 높아지는 불만과 분노의 분출
이기도 하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들이 세번째 “컨
턴전시 플랜”을 가동해 대화록을 아예 공
개했겠는가. 이것은 저들의 자신감이 아
니라 위기감을 보여 준다.

박근혜는 이미 초유의 임기 초 위기를
겪었고, 경제 위기 조짐도 갈수록 깊어지
고 있다. 이 속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투
쟁 자신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6월
27일에는 건설 노동자 1만 5천 명이 서울
시청 광장에 모여 힘을 보여 줬다. 철도 노
동자들은 민영화에 반대해 90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만약 거리 촛불과 노동자 투쟁이 결합
하면서 더 커진다면 그 파급력은 작지 않
을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무리수를

두면서 우파 결집과 ‘종북’ 몰이에 나서는
것이다. 경찰이 26일 범민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두 명을 체포한 것도 이런
공세의 일부다.

동시에 박근혜는 민주당의 오락가락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NLL
사수와 안보’에서는 여야가 없다며 우파
에 타협해 왔다. 진보정당들은 아직 분열
과 위기의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박근혜는 이 틈을 파고들며 위기 탈출
을 노릴 것이다. 또, 국정조사를 하면서
시간끌기와 김빠기, 물타기를 하고 기껏
꼬리 자르기 정도를 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 유린뿐 아니라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철도 민영화 등 각
종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몸통이 박근혜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세를 높여야 한
다.

국정조사나 민주당만 쳐다보지 말고,
다양한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아래로부터
대중행동들을 더 확대해야 한다. 거리의
촛불과 노동자 투쟁을 적극 결합시키며,
투쟁을 더욱 전진시켜야 한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재벌 퍼주기·노동자 쥐어짜기’에도 맞서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 증시 폭락 속에 한국 증시도 크게 출렁거렸다. 더구나 한국 경제는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 5백대 기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8퍼센트가 줄었다. 1천 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결국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재벌 퍼주기’와 노동자 쥐어짜기한 것이 고장난 한국 경제를 고치지 못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거의 정체 상태이고, 이 때문에 올해 4월까지 세수(稅收)는 지난해에 비해 8조 7천억 원이나 감소했다. 전경련같은 자본가 단체는 ‘경제 민주화 때문에 나라 경제 망한다’며 역겨운 선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선거용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다. “기업을 위축시키는 경제 민주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두 배로 인상한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 ‘4대 중증질환 보험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뒤집어졌다. 오히려 박근혜는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를 방조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재벌들의 통상임금 떼먹기를 앞장서 돕고 있고, 최악의 저질 일자리인 ‘시



5월 2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모인 철도노동자들이 '요금 폭등, 대형 참사, 대량 해고'를 낳을 철도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간제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에서는 ‘꽃을 심겠다며 사람을 철거’했고, 전국 각지의 노동자 농성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침탈·철거당했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도 뒤집히고 있다. 심지어 ‘부족한 세수를 해결’하겠다며

신용카드 세액공제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부족한 세금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재벌천국·서민지옥’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의 민주주의 유린뿐 아니라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친기업·반노동 정책

에도 맞서야 한다. 민영화 반대,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결합시키며 촛불은 더 크고 뜨겁게 타올라야 한다. 거리의 촛불과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하나가 돼야 한다. 터키와 브라질 민중들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줬다.

NLL에 대한 토 나오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이 공개되자, 우파는 ‘적 앞에서 영토와 자존심을 포기했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노무현은 “NLL 말만 나오면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파가 딱 그 꼴이다.

NLL은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다. 남북 간에는 해상경계선이 합의된 적이 없다. NLL은 유엔사령부가 한국전쟁 이후 남한 함정들이 “이 선[NLL] 이북으로 향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1974년에 CIA조차 내부 보고서에서 NLL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남북 간 해상경계선으로 삼을 수 없고 북한도 이를 인정할 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남한이 이것을 영토선이라고 우기며 호전적 정책을 펼치고, 이에 북한이 맞대응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서해는 ‘화약고’가 됐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다.

이처럼 서해를 죄없는 젊은이들의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 더 많은 ‘피와

죽음’을 선동하고 있다. 특히 ‘NLL 사수’를 떠드는 우파 정치인 중에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자가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이다.

우파가 미국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야만적인 학살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패권적 행태를 지적한 것은 매우 상식적이다.

더구나 우파 자신들도 필요하면 북한 독재자들과 ‘떡담’을 주고받아 왔다. 예컨대 전두환은 김일성에게 보낸 친서에서 “주석님께 ...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하고 쓴 바 있다.

북한 정부도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 하였던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2002년 방북 당시 박근혜가 한 ‘종북’ 발언을 언급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비판받을 점은 미국과 친미 우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에 있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이었던 마이클 그린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영국 다음 가는 대규모 이라크 파병에다 한미FTA 체결, 주한미군 용산 기지 이전 등 정책적으로 한미동맹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

했을 정도다.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그보다 더 못났다. 민주당은 대선 때부터 ‘NLL을 확고히 지키며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겠다’는 보수적 입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과 독립적인 관점에서 박근혜의 친제국주의적이고 호전적인 정책에 맞서야 한다.

www.marxism.or.kr

13번째 열리는 가장 오래된 최대 규모 마르크스주의 포럼

마르크시즘 2013

7월 19일(금) - 22일(월) 장소: 고려대학교 주최: 노동자연대다함께

지정학적 위기: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계급투쟁 전망 등 50여 개의 주제
존 롤리뉴, 박노자, 김수행, 우석균 등 50여 명의 국내외 연사



관련 기사들이 실린 **레프트21** 107호를 구입해 보십시오.

<http://www.left21.com>

구입 문의: 02-777-2792 |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